

# 혼란과 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방인’

신선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범유행(이하, 코로나19)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한때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항상 찾으면 그 자리에 온전히 있던 것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점점 찾기 힘들어졌다. 다행히 백신의 개발 및 보급으로 인해 소중했던 일상으로의 복귀를 조심스레 점치게 되었지만, 그것이 언제쯤 완전히 가능할지에 관해서는 감론을박이 여전하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동의하는 안타까운 사실은 코로나19가 인류 사회 전반에 전례 없는 상흔(傷痕)을 남겼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안타깝게도 그 상처의 깊이는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야말로 제각각’이었다.<sup>1)</sup>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듯이, 취약계층이 마주한 사회경제적 상처가 훨씬 크고 깊었음은 물론이다. 심한 상처는 오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한다. 아니,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는 ‘오롯한’ 흉터를 남길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전무후무한 확장적 재정 및 고용 유지 정책을 단행했다. 유사한 위기 상황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20년 기준) 2조 2천억 달러

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별, 연령, 학력, 고용 형태, 산업, 직업, 직무, 가구 형태, 지역 등에서 비롯되는 층격의 이질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대응을 실시한 미국은 CARES Act<sup>2)</sup>를 통한 실업수당 확대와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을 병행 운영하였으며, 일본은 근로자 개인이 보다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직접 지급 지원금을 신설하였다. 독일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고용 충격으로부터의 ‘방파제’ 역할을 해냈던 단축 근로제(Kurzarbeit, 조업단축)를 더욱 과감하게 단행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가 파견·용역·비정형 노동자들 역시 보호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분명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고무적 변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아무런 갑주(甲冑)없이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난민, 이민자 등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 선진국이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고,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유지 기제로서의 외국인 노동력은 국가 경제의 발전·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 기여 효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2016년 기준 74조 1천억 원에 이르며, (2016년 당시 추정 기준) 2026년에는 효과의 크기가 2016년의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동관, 2016).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기 위해 2060년 기준 약 1,700만 명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조경엽·강동관, 2015).<sup>3)</sup> 여타 선진국인 캐나다,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Walmsley & Winters(2005)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가 전체 노동력의 3% 규모로 증가할 때 국가별 실질 GDP는 캐나다 1.08%, 일본 1.04%, 미국 0.99%, 독일 0.9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sup>4)</sup> 외국인 노동력의 유치 및 활용과 정책적 지원을 통한 통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인구 위기 시대의 엄중한 ‘생존 전략’이 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난민, 이민자 등의 최(最)취약계층을 그야말로 ‘흠대받는 손님’으

2) The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s Security Act

3)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합법적)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 8천여 명 수준이다.

4) Global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한 추정 결과

로 전락시켰다. 먼저, 상황이 더욱 심각한 난민의 경우를 살펴보자. 난민(Refugee)과 (경제적) 이민자(Migrant)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할 개념임을 먼저 밝힌다.<sup>5)</sup> (이 둘의 정확한 차이는 필자의 연구인 Shin(2022)에 서술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망명자는 정착지에서 공식적·합법적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전에 ‘지리적 이동’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들을 흔히 ‘이동 중인 인구(Transitory persons)’라 지칭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 및 국가 간 이동 제한은 이들의 자구책인 ‘이동 행위’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되었다. 일례로, 유엔난민기구(UHCR)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시리아 난민의 80%가 본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임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종 정착지로의 이동이 막힌 상태인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는 난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정성을 배가(倍加)시켰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적대적 격리 조치, (열악한 난민 수용시설 내) 거리 두기의 어려움, 차별 및 생계 위협 등으로 난민들이 느끼는 중압감은 한계에 달하게 되었다. 난민 아동의 교육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은 물론이다. 2021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도착 후 가장 먼저 물어본 것은 다름 아닌 자녀들의 교육 문제였다고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학령기 난민 아동의 절반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UHCR, 2021). 그리고 전염병 위기 사태의 발발은 이러한 기회의 부재(不在)를 한없이 심화시켰다.

이민 노동자의 경우는 어떠할까. 최근 노동경제학 내 다수의 실증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롯된 고용 충격이 이민 노동자에게 훨씬 심각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Borjas & Cassidy(2020)가 미국 CPS Basic Monthly Files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20년 2~4월의 기간에 관찰된 고용률 하락은 이민 노동자들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Vintar, Beltramo, Delius, Egger

5) UNHCR의 난민협약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정의된다.

& Pape, 2022). 필자 또한 2014~2020년의 기간에 수집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데이터에 기반해 「코로나19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작금의 전염병 위기 사태가 이민 노동자들의 취업확률을 2.5~3.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되었다(Shin, 2021). 특히, (주로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내국인 여성 대비 4.4%포인트 정도 강한 취업확률 하락을 겪은 것이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특히 깊은 상흔’을 겪게 하는 것일까. Borjas & Cassidy(2020)는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가 저숙련 단순 직무·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택·원격근무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Shin(2021)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등 (내국인 고용유지의 주된 기제가 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국지적으로 심화된 충격’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심화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Dustmann, Glitz & Vogel(2010)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노동시장 내 최(最)취약계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고용 충격은 이들의 송금(Remittance)에 크게 의존하는 본국 가족들의 생계 문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수용국(Receiving country)의 국경을 넘어 확산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0년 기준 전 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전년 대비 10~20%가량 급감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5%에 비교했을 때에도 무려 2~4배 수준으로, 세계은행이 관련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최대 낙폭이다. 송금액의 감소는 특히 식료품 등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즉각적 지출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충격의 부정적 승수(乘數)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1960~1970년대 파독 간호사와 광부들이 보낸 송금액에 크게 의존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이 겪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 생계 문제에 더욱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sup>6)</sup>

6) 1965~1967년의 경우 파독 간호사 및 광부의 송금액이 당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6~1.9%에 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증가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외국인 이주 노동자 30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29%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심해졌다고 답했다. 일상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외국인 역시 60%에 달했다.<sup>7)</sup>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막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임금 체불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 역시 그들이 겪는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1년 3월,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국내·외에서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전무후무한 전염병 위기 사태이기에 온 힘을 다하여 추가 확산을 막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무작정 그들의 방역 의식만을 탓하기보다는 (밀접·밀집·밀폐[3밀(密)]가 불가피한) 열악한 근로 및 거주 환경을 점검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를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경제에 적잖이 기여해 왔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없는 사회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혼란스러울 것이다. 코로나19 창궐과 함께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에 전례 없이 크고 긴 마찰이 생겨,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했던 농림수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물류업 등이 이미 심각한 ‘인력 경화(硬化)’ 현상을 겪고 있다. 영국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부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생필품 공급이 더욱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호주 역시 요식업 인력난 심화로 크게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건설업, 물류업, 축산업 등에서 심각한 ‘외국인력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임시 비자를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Seasonal migrant workers)들이 입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농작물의 작황 규모가 줄어 물가 상승이 촉발되기도 한다. 그들의 부재가 가져온 혼란을 보며, 그들의 존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기이다.

난민·이민자 등 국가 간 노동력 이동에 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로서 최근 밤잠을 설치게

7) 출처: 중앙일보(2021.12.21), 「“한국 이름 만들어 오라” ... 코로나 틈타 판친다, 제노포비아」.

되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또 한 번의 ‘디아스포라(Diaspora)’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3월 9일 기준 이미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이 발생했으며, UNHCR은 러시아의 공격이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수가 최대 1천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은 주로 폴란드(1,412,502명), 헝가리(214,160명), 슬로바키아(165,199명) 등의 동유럽 국가로 향했는데,<sup>8)</sup> 이들 국가들은 코로나 19 대응 및 회복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증폭된다. 비슷한 문화를 공유해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수용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난민의 급격한 유입이 노동력 공급 충격(Labor supply shock)으로 작용하여 수용국 국민과 난민 간 노동력 대체 또는 구직 경쟁이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반(反)난민 정서와 외국인 혐오가 확산할 수 있다. 전쟁 발발 직전 우크라이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39%에 그쳐, 전쟁 난민들이 수용국 내 ‘방역의 걸림돌’로 여겨질 우려도 있다.

바야흐로 오늘날의 우리는 위기와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는 것이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난민, 이민자 등 역시 엄연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냉혹함과 깊은 상흔에 대해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인류애적 연민이 요구되는 때이다. <<11

8) 2022년 3월 9일, UN 발표 기준.

---



---

 참고문헌
 

---



---

- 강동관(2016),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과 경제기여효과』, IOM 이민정책연구원.
- 조경엽·강동관(2015),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 Borjas, G. and H. Cassidy(2020), “The Adverse Effect of the COVID-19 Labor Market Shock on Immigrant Employ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Dustmann, C., A. Glitz and T. Vogel(2010), “Employment, Wages, and the Economic Cycle : Differences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s”, *European Economic Review*, 54(1), pp.1~17.
- Shin, S.(2021), *The Labor Market Impact of COVID-19 on Migrants in South Korea*, Korea Labor Institute.
- \_\_\_\_\_(2022), “Evaluating the Effect of the Matching Grant Program for Refugees : An Observational Study Using Matching, Weighting, and the Mantel-Haenszel Test”, *Journal of Labor Research*.
- UNHCR(2021), “With You”, Newsletter.
- Vintar, M., T. Beltramo, A. Delius, D. Egger and U. Pape(2022), “Impact of COVID-19 on Labor Market Outcomes of Refugees and Nationals in Kenya”, The World Bank.
- Walmsley, T. and A. Winters(2005),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the Temporary Movement of Natural Persons : a Simulatio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20(4), pp.688~726.